

# 오늘부터 심사인데... 예산소위 구성 난항

### 여야 위원정수 놓고 대립 10개 상임위 예산·법안 심사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곳곳 이견

국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와 예산·법안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기재위는 종합부동산세법(중부세) 개정안 등 모두 32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중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상정됐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세 법안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당시 대책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증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80%인 중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9·13대책도 포함됐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당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주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관련 세법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됐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만 기재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을 놓고 전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예산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 의조치 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애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지속했다.

전날 소소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주장이 대두했으나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소소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삭감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며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애초 가동 예정이던 15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대립했다.

올해 예정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더불어민주당 22명·자유한국당 19명·바른미래당 5명·비교섭단체 4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맞춰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만 기재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을 놓고 전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예산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 의조치 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애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지속했다.

전날 소소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주장이 대두했으나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소소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삭감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며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애초 가동 예정이던 15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대립했다.

올해 예정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더불어민주당 22명·자유한국당 19명·바른미래당 5명·비교섭단체 4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맞춰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만 기재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을 놓고 전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예산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 의조치 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애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지속했다.

전날 소소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주장이 대두했으나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소소위 차원에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삭감 규모에 이견이 생겼다"며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애초 가동 예정이던 15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여야가 대립했다.

올해 예정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더불어민주당 22명·자유한국당 19명·바른미래당 5명·비교섭단체 4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맞춰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계청 예산을 제외하고 증감액만 기재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예산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통계청 예산은 가계동향조사 추가 예산(130억원)을 놓고 전역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 등 야당과 예산 사수에 나선 민주당이 충돌해 예산심사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 의조치 하지 못했다.

산업위는 애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지속했다.

전날 소소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주장이 대두했으나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유치원 3법’ 처리 주춤

### 박용진 “한국당 고의 지연”... 한국당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4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정상화 3법’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들 법안의 심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어겼다’며 맞말을 냈다.

교육위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간사로서 한국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자체 법안 제출 후 함께 심사하기로 지난 6일 간사 회의에서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

에 박용진 의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비 의혹 제기 는 동료 의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 이고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 법안소위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지금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이 12월 초 발의 예정이라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적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다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유치원 3법의 통과에 협조해주길 한국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선거 연령 18세 하향 법 통과 최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라고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는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른 현안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는 “패키지로 처리하려다 보면 항상 안 되는 측면이 많다”며 “다른 법안들은 안 되더라도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여야 간 합의하는 대로 바로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서 당신들이 18세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면 좋겠다”며 “왜 18살 청년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안 된다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당정 “국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여 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회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올해 1월 국

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안보정보원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획정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손창열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이다.

정개특위는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획정위원을 확정했다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설명했다.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구성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5일부터 가동돼야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개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달가량 늦장 출범하게 됐다.

이날 구성이 완료된 획정위는 오는 2020년 4월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나선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원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리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